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해야

글_ 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sklee@sema.or.kr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교안보면에서는 남북관계, 미·중·일과의 관계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인식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시티즌십을 바탕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슈화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성장과 분배,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이 추진되어 왔다.

과학기술제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국정목표로 설정되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었으며, 그 동안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내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과학기술에 관한 실질적인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과학기술부로 넘어가는 등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통령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의 결과이며,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나 정책과제들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일부 부문은 좀 더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문의 혁신은 총론적으로 정책결정과 개혁조치는 완료되었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문 국정목표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과 이에 걸맞은 일련의 과학기술 행정조직개편과 혁신시스템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의 근간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어왔다. 1967년 설립된 과학기술처(부)는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부처의 하나로 발족되었고, KIST를 비롯한 출연연구기관들도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의 도입 및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삼았다.

이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부처가 됨으로써 경제정책에 있어서

는 재정계획, 무역, 금융 등을 포함한 거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산업·기술 등 미시경제는 과학기술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또는 3만 달러 시대의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개발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은 이러한 경제목표 이외에도 독자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러시아, 중국의 과학기술은 경제보다는 국방,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이렇게 쌓아온 튼튼한 과학기술기반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동안 부처간 경쟁으로 인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및 과제의 중복과 낭비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80년대 이후 과학기술연구개발 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과제중복 문제가 대두되고 부처간 갈등이 적지 않았으며, 부처간 경쟁관계로 중복과제의 조정, 평가 또한 쉽지 않았던 것은 과학기술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개혁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예산배분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일원화되고, 과기부가 수행하던 일부 연구개발기능이 각 부처로 이관됨으로써 부처간 경쟁에서 부처간 협력으로 시스템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연구개발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인과 연구원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부의 부총리부처 격상 등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으로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IMF 구조조정 이후 침체되어왔던 과학기술계 연구원들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연구환경 개선 등의 정책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의식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성공한다

정부의 과학기술체제가 개편된 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선정, 대덕특구법의 제정,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상설화 등 과학기술법령·제도·정책의 구축과 정비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시스템의 변화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연구 개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주체에 대한 문제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개발과제 등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와 뒷받침이 중요하지만 그 중심축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공부문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정부출연(연)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민간산업계는 투자·연구 역량 면에서 정부부문을 능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학계는 우리의 과학기술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기초연구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목표와 중장기 개발과제는 출연(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연(연)이 이러한 국가적 큰 그림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강화는 물론 기관운영, 연구환경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연) 설립 초기 본래의 설립취지와 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연구인력의 대부분은 국내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우수한 인력으로 이들에 대한 대우는 교수, 공무원 등 어느 사회 지도층보다도 높았으며, 기관운영과 연구개발은 자율성을 중시하여 기관장 판단과 책임 아래 수행되었다.


출연(연)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위주의 연구과제 선정, 연구예산 집행의 과도한 통제 등 연구개발이나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주는 장벽이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기관장 공모제의 개선 및 기관장 연임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연구성과의 엄격한 평가와 인센티브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국가연구개발 참여인력에 지급하는 기술료 지급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우수연구원의 성과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규모를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또한, 출연(연)의 기본사업비를

2004년 33.5%에서 2008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연)의 고유기능에 부합되는 사업을 이관하는 것도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 노후보장 및 복지후생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이공계 인력 우대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 경영전략, 장기적 생존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업무여건과 특성을 잘 헤아려 정책시행의 순서를 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영년직 연구원제, 정년 후 연장계약제, 퇴직공제사업 등 모든 연구원 대상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고, 일류과학기술자·과학기술공로자들의 명예와 지위를 존중하는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퇴직공제사업에 모든 출연(연) 연구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총론면에서 국정의 중심목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시스템의 개혁 등 큰 그림은 완성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각론이다. 정부출연(연) 개혁은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인 공공부문의 연구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총론부분의 성패를 좌우할 아킬레스건이다. 국가경쟁력부문이나 과학기술계의 위상강화화도 직결되어 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출연(연)의 개혁은 출연(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정부는 여건조성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년 과학기술계 신년하례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한다.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다했다. 이제 과학기술계가 화답할 차례다." 



글쓴이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과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했다.